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55호 | 2022년 12월 22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연희 원장직무대행 | idp.theminjoo.kr

윤석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물가대책, 오히려 물가지수 상승

남 국 현 연구위원(경제학 박사)

《요약》

■ 고물가 현황

- 정부는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시장 친화적인 물가관리로 물가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
 - 22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.9%로 IMF 시기인 98년 3분기 7%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, 생산자물가지수는 114.4(1월)에서 120.6(10월)으로 5.4% 증가함
 -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는 교통 10.6%, 음식 및 숙박 8.6%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7.9%, 기타 상품서비스 7.0%, 주택·전기·연료 6.2% 순으로 높게 나타남

■ 문제점

-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금액은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비(-13.5%), 식료품비(-12.4%), 주거수도광열비(-6.1%) 순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정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시장친화적인 물가관리로 물가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생산자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함
- 먹거리·산업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나, 생산물가가 하락하지 않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여 정책의 실효성 문제
- 시장 친화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하느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
 -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,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정책을 마련했지만, 1조7천원으로 예산이 부족함

■ 정책제언

- 전 국민대상으로 물가상승 지원금 지급(5조원)
-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정책대상 품목확대 및 시장가격 모니터링 강화
- 소비지출이 감소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-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외식가격공표제를 시행하여 외식물가 안정을 유도
- 이자비용이 증가한 가구를 위한 대환대출 및 이자감면 프로그램 시행

▶ 키워드: 고물가, 소비자물가지수, 생산자물가지수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고물가의 현황

○ 정부는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시장 친화적인 물가관리로 물가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

○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

- 22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.9%로 IMF 시기인 98년 3분기 7%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
 -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라 식료품·비주류음료, 주택·연료 등 12개 대분류와 39개 중분류, 71개 소분류로 분류하여 작성한 지수임
 - <표 1,2>에서 품목별로 보면,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교통 10.6%, 음식 및 숙박 8.6%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7.9%, 기타 상품서비스 7.0%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 6.2% 순으로 높게 나타남
 - 교통물가의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원인이고, 음식 및 숙박비는 외식 물가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이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숙박이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
 - 식료품·비주류음료 물가상승의 원인은 쌀 가격이 전년 대비 16.2% 하락한 반면, 식용유지 33.1%, 채소 23.8%, 육류 7.2%, 비주류 음료 7%, 과자류 8.1% 등 대부분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함
 - 기타 상품·서비스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누(24.9%), 면도기(15.4%), 화장품(14.9%) 등 생활용품 가격이 증가하고, 목욕료(9.8%) 등 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한 것이 원인
 - 주택·연료는 각각 주택임차료 1.8%, 수도비 4.2%, 전기 및 연료비 21.8%가 상승하여 전기 및 연료비가 물가상승분의 대부분을 반영하고, 국제에너지가격 상승과 전기·가스 요금인상이 원인임
- ※ 물가상승의 원인분석은 71개 소분류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함

<표 1>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(단위: %)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
소비자물가 총지수	3.8	5.4	5.9
식료품 및 비주류음료	4.1	5.7	7.9
주류 및 담배	1.3	2.5	2.4
의류 및 신발	1.7	2.6	3.3
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	3.5	4.9	6.2
가정용품·가사서비스	3.9	5.7	5.1
보건	0.4	0.7	0.9

자료: 통계청

<표 2>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(단위: %)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
교통	9.4	15.1	10.6
통신	0.3	0.8	1.1
오락 및 문화	1.8	2.6	3.3
교육	1.1	1.2	1.5
음식 및 숙박	6.0	7.2	8.6
기타 상품·서비스	4.2	5.2	7.0

자료: 통계청

2. 문제점

1) 고물가의 부정적 영향

○ 가구의 소비지출금액의 감소

-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지출내역을

조사한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금액을 계산함

- <표 3>에서 3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2.8% 하락하였고, 소비지출금액은 0.3% 증가함
- 품목별로 보면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 이용금액(-13.5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 구입비(-12.4%), 주거수도광열비(-6.1%)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가정용품은 내구재인 가전제품(-19.2%)을 전년 대비 가장 적게 소비하였고, 가구장식서비스(-12.9%), 가사용품(-12.8%) 등 가구서비스이용과 소모품 비용도 많이 절약한 것으로 조사됨
- 식료품·음료비는 빵과 떡류(4.5%)를 제외하고 모든 식품의 소비량이 감소하였고, 유지류(-24.4%), 곡물(-20.9%), 해조류(-19.6%), 조미식품(-18.6%), 채소(-14%), 과일(-12.9%), 커피·차(-11%) 순으로 감소하였고, 특히 곡물은 전기 대비 물가가 하락하였지만 소비량이 급감함
- 주거수도광열비는 주택임차료(-7.5%), 상하수도비(-2.3%), 연료비(-0.2%) 순으로 가계지출이 감소하였고, 전가·가스가격 상승에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반면,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거비용이 많이 감소함
-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오락문화비(23.8%), 음식숙박비(13.1%) 등의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,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(14.1%)이 증가하여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

<표 3> 분기별 소비지출금액(단위: %)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
소득	6.0	6.9	-2.8
소비지출금액	0.8	0.4	0.3
식료품비주류음료구입비	-3.1	-7.1	-12.4
의류신발구입비	3.9	9.6	11.6
주거수도광열비	-1.1	-7.8	-6.1
교통비	-6.0	-2.8	-1.8
통신비	1.0	2.8	1.7

자료: 가계동향조사, 통계청

<표 4> 분기별 소비지출금액(단위: %)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
주류담배구입비	-1.9	-5.3	-3.1
가정용품가사서비스이용금액	-13.8	-14.3	-13.5
보건제품구입비	7.1	1.8	1.0
오락문화비	2.8	16.8	23.8
교육비	12.3	9.7	6.6
음식숙박비	7.5	9.2	13.1
기타상품서비스이용금액	-0.2	-0.7	-2.6
이자비용	-5.7	1.0	14.1

자료: 가계동향조사, 통계청

○ 소득과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금액의 감소

- <표 5>를 보면,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액 변화를 12개 대분류 중 소비지출이 감소한 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냄
- 1분위 가구의 3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-6.5%로 다른 분위가구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함

<표 5> 3분기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금액(단위: %)

구분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
소득	-6.5	-3.0	-3.1	-2.9	-1.8
식료품구입비	-7.4	-11.0	-13.8	-14.5	-12.6
주거수도광열비	-3.3	-1.9	-8.7	2.5	-15.8
교통비	-11.7	1.4	8.1	-8.7	-1.4
통신비	-0.8	9.7	6.0	-0.4	-2.5
주류담배구입비	-10.3	-6.5	-2.1	-3.5	3.0
가정용품구입비	7.5	-23.6	-20.4	-5.0	-16.1
기타상품서비스비	7.1	-3.5	-4.7	-8.4	1.1
이자비용	0.9	-1.1	18.3	20.7	12.4

자료: 가계동향조사, 통계청

<표 6> 3분기 연령별 소비지출금액(단위: %)

구분	20대	30대	40대	50대	60세
소득	-7.0	-2.0	-1.7	-1.9	-3.0
식료품구입비	-12.1	-17.4	-12.3	-9.9	-10.3
주거수도광열비	5.4	-10.4	2.9	-10.4	-10.1
교통비	-12.4	-22.9	-1.3	10.6	9.0
통신비	-10.5	-3.1	4.0	0.7	8.7
주류담배구입비	-1.4	-6.9	-0.7	2.4	-9.0
가정용품구입비	-27.5	-0.3	-15.5	-26.7	-1.2
기타상품서비스비	-22.9	4.9	-5.4	-2.2	-0.2
이자비용	4.0	9.8	15.9	5.8	35.6

자료: 가계동향조사, 통계청

- 식료품 구입비는 엥겔지수가 낮은 고분위 소득계층에서 식료품 물가상승에 소비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고, 저소득층의 필수 소비품목인 식료품 소비는 적게 감소함
 - 주거수도광열비는 5분위와 3분위 소득계층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, 연료비보다는 주로 주택유지수선비 지출액이 크게 감소한 효과로 조사됨
 - 소득 1분위 계층은 물가상승에 교통비와 주류담배구입비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남
 - 가정용품구입비는 2, 3분위 가구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, 이자비용은 신용이 높은 3, 4분위의 중산층 가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함
- <표 6>에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연령대별 소비지출 변화를 조사함
 - 3분기 실질소득은 20대가 전년대비 -7%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, 20대는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가정용품, 기타상품서비스, 교통·통신비 등 소비지출금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감소함
 -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물가상승에 따라 식료품비, 주거수도광열비, 주류담배비 등 소비지출이 많이 줄었고, 특히 이자비용이 35.6%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가계 부담이 되고 있음

2) 정부대책의 문제점

○ 정부의 고물가 대책

-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(5.30)
 - 돼지고기·식용유·커피 등 수입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한 시장가격 하락 유도
 - 김치, 된장,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
 -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
 -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(1.7%)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
 - 승용차 개별소비세 30%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등으로 교통·통신비 경감
 -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에너지 바우처 등 확대
-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(6.16)
 - 유류세 30%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 및 LNG·유연탄의 관세, 개별소비세 인하('22.8.1~12.31)
 - 친환경 차량(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)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
- 민생물가 점검회의(9.19)
 - 배추·무 등 김장채소 수급안전 대책 마련
 - 9월말 종료예정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화물·운송업계 부담 완화

○ 정부대응의 문제점

- 정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시장 친화적인 물가관리로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생산자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함
 - 생산자물가지수 (5월) 119.4 → (10월) 120.6, 농산물 126.5 → 135.1, 전기·가스 105.1 → 131.2
- 먹거리·산업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나, 생산물가가 하락하지

않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여 정책의 실효성 문제

- (생산자물가지수) 유지 (5월) 137.7 → (10월) 150.9, 커피·차류 102.6 → 106.9, 사료 130.9 → 145
- 밀가루 등 원료비 지원과 김치, 된장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(10%)를 면제하였으나,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
 - (생산자물가지수) 밀가루 (5월) 109.7 → (10월) 130.1, 김치 120.4 → 142.5, 된장 109.7 → 122.7
- 시장 친화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하느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
 -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,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정책을 마련했지만, 1조7천원으로 예산이 부족함
 - 유류세, 관세·부가가치세 등 세금감면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은 10조원으로 예상됨
-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(5.29)에서 일반 용도로 편성된 재원 36조 4천억원 가운데 ‘생활물가 안정’에는 3천억이 배분되어 물가상승을 낮추기에 부족한 예산임
 -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(600억원), 농어가 원료 구매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(1천억원), 밀가루 제분업체에 가격 상승분의 70% 지원(546억원) 등 생활물가안정 예산으로 배분됨
- 소비자권익포럼에서 만 19~69세의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, 조사대상의 78.4%가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
 -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를 ‘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27.1%, ‘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’는 51.3%로 조사되었고, ‘외식비가 올랐다’는 응답은 83.3%에 달함

3. 정책제언

○ 전 국민대상으로 물가상승 지원금 지급(5조원)

- 소비지출에 포함된 물가상승분 5%를 전 국민에게 소득분위별로 차감해 차등지급, 소득1분위 소비지출의 물가상승분(35만원, 6개월분)을 지급하고, 차상위 소득분위는 5만원씩 차감 지급
 -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 및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가구당 200~10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
 - 국제통화기금(IMF)이 31개 선진국 대상 물가안정 대책을 조사한 결과 현금성 지원(48%)이 가장 보편적임

○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정책대상 품목확대 및 시장가격 모니터링 강화

- 정책대상인 14개 품목들은 물가지수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낮아 품목확대 필요, 물가가 높은 냉동건조수산물, 채소·과실 등 품목대상 30개 확대
 - 공급자들은 한번 오른 단가를 낮추지 않은 경향이 있어 관세와 부가세 인하로 세제완화 혜택을 본 기업들이 제품가격을 인하하는지 공급시장 모니터링 강화

○ 소비지출이 감소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
- 올해 3분기 소비지출금액은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비(-13.5%), 식료품비·주류음료비(-12.4%) 등 소비량이 많이 감소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

- 연령별로 3분위 소비지출금액은 20대 연령층에서 가정용품구입비(-27.5%), 기타상품서비스비(-22.9%), 60세 이상 고령층은 식료품비(-10.3%), 주거수도광열비(-10.1%) 등이 감소하여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이 필요

○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외식가격공표제를 시행하여 외식물가 안정을 유도

- 외식가격공표제는 전 정부에서 매장 100개 이상을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치킨, 햄버거, 피자 등 12개 품목에 대해 가격동향을 체크해 공개하는 제도임
- 이번 정부는 한국외식산업협회의 요구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던 제도를 5월 11일부터 폐지함
- 외식가격공표제가 시행된 2월에서 4월까지 외식물가지수는 6.2% → 6.6%로 0.4%p 증가한 반면, 제도폐지 이후 외식물가는 4월에서 9월까지 6.6% → 9%로 2.4%p 증가함

○ 이자비용이 증가한 가구를 위한 대환대출 및 이자감면 프로그램 시행

- 22년 3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은 전년대비 14.1% 증가하였고, 소득분위별로 4분위 20.7%, 3분위 18.3%,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35.6%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이자비용 감면정책 필요
- 정부재원으로 1.5%p 이자감면 지원하고, 금융기관은 1.5%p 추가 금리인하(가산금리 인하)로 지원
- 신용보증출자(5조원) → 보증배수(10배) → 대환대출 여력 확보(50조원)